

# 日 '독도' 왜곡교육 강화...한국 정부 철회 촉구

## 초등학교 교과서·교사 지도 지침에 '불법점거' 명시 위안부 문제 이어 독도 영유권 문제 대립 격화 일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 주장을 초등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지침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나서, 위안부 합의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한일관계가 또 한번 독도 영유권 문제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1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2020년부터 초등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공표했다.

해설서는 이틀 지역과 관련,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됐던 적이 없는 영토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선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는 점과 독도에 대해서 한국에 반박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할 것을 요구했다. 해설서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해설서는 영토의 범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북방영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영토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언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도와 지구본을 사용해 방위, 위도와 경도 등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도 다루도록 했다.

해설서는 이들 지역과 관련,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됐던 적이 없는 영토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선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는 점과 독도에 대해서 한국에 반박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할 것을 요구했다. 해설서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 해설서도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가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입장은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선 '미해결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히고, "영토문제 발생부터 현재 이르는 경위에 덧붙여 방문과 어업,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됐으며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에 일본측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설서는 일본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국가 주권과 관련지어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오는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번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5월 10일) 이후 일본의 역사 또는 독도 관련 조치에 대해 처음 나온 항의 성명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오후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5·18항쟁지 전남도청 적벽돌 보존키로

### 또문화전당서 인수

### 도청복원 활용 계획

광주시는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보관 중인 적벽돌 등 5·18 관련 물품을 인수하여 보존·관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보관·관리 중인 물품은 적벽돌 2000여장, 천정기동 7조, 기동 4개, 각재와 목재 5t 등으로 그동안 전남 화순 능주소재 야적장에서 관리해왔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4월부터 협의해 이들 물품을 5·18사적지 제26호로 지정된 옛 505보안부대에 보관하기로 했다.

특히 적벽돌 등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앞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옛 전남도청 복원 시 잘 활용해 5·18 역사성 확보 등 광주정신을 이어가겠다"며 "옛 전남도청 복원팀에서 추진 중인 복원자료조사와 수집에도 탄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의회, 5·18사적지 실태 점검 토론회

전남도의회는 21일 도내 8개 시·군에 분포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남 지역 5·18 사적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5월 관련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엔 전남도청 강성회 도의원과 5·18 기념재단 김양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인권평화연구소 조영희 소장을 좌장으로 강성회 도의원과 5·18 기념재단 김양래 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택 도의원, 고영봉 전남도 도민소통실장, (사)목포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객재구 이사가 토론회에 참여해 열린 토론회를 펼

쳤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 도의회가 뒤늦게라도 5·18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동안 전남은 5·18과 관련,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의회는 토론회에서 도출한 개선방안을 적용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서동욱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5·18이 더 이상 왜곡되고 폄하된 역사가 아닌 새로운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농업재해 복구비 현실화 해 달라"

### 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3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시 복구에 드는 비용을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재난복구 비용부담 규정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성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가뭄·강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 복구 때 실제 소요된 복구비용 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재해복구비 보조 비율을 피해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고지원 기준인 재난지수(현행 300 이상)를 국고지원, 미만 지수(지자체 지원)를 150이상으로 낮추는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



김성일 도의원



박철홍 도의원

했다. 한편 도의회 박철홍(더불어민주당·담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지역 우박피해 농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건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에는 지난해 31일 담양 등지에 쏟아진 우박으로 매실·감 등 농작물 1891ha가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도 10월 국제수목화교류전

2018 전남 국제수목화 비엔날레 사전행사로서 오는 10월 13일부터 한 달간 목포와 진도에서 열리는 2017 국제수목화 교류전이 '수목의 여명·빛은 동방으로부터'란 주제로 열린다.

전남도는 21일 전남문화관광재단 대회의실에서 우기종 정부부지사를 비롯해 전시기획, 미술평론, 예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 국제수목화 비엔날레 자문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국제수목화 교류전' 행사기획(안) 보고회를 열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목포와 진도에서 열리는 '2017 국제수목화 교류전'에서는 중국·일본 등 5개국 200여작가, 600여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행사, 관람객 체험 등 수목화를 테마로 국제 문화예술 축제로 치러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 무인기 후속조치 발표 허태근 육군 준장이 21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 무인기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했더니 임금 오르고 예산 절감

### 74명 직접고용 전환 분석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예산절감은 물론 노동자들의 임금 향상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있는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결과 노동자들의 임

금은 인상된 반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시 본청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이들 가운데 직접고용 2년이 경과한 74명(60세 초과 촉탁직 재고용 11명 포함)은 올 초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98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이 된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시 본청 노동자 74명의 소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간접고용 당시 2년간의 용역금액은 54억9199만원이었지만 직접고용 전환 이후 2년간 지출된 비용은 50억5211만원으로 4억3988억원이 줄어 평균 8%의 감소율을 보였다. 연간 2억2000여만원이 절감된 것이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업체이윤 등이 절감되기 때문으로 보

인다.

또한 지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공무원 임금 증감률, 공무원 임금 증감률, 위탁비 증감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금은 평균 3.27%, 공무원직은 7.15%, 위탁비는 7.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건비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1월 최초로 직접고용 전환 당시 8~15%까지 임금을 인상했고 복지포인트,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가 및 경조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